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강화 유일한 해결책은 ‘원자력’

✎ 박병인 기자 | ㉠ 승인 2025.05.16 01:51

원자력학회, 더불어민주당에 ‘원자력 정책 제안서’ 공식 전달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당에 제안하기 위해 작성한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를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공식 전달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도 이른 시간 내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학회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차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서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견인차, 원자력 ▲책임감 있는 에너지 원자력,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 미래 먹거리, 원자력 ▲국민건강 지킴이, 방사선 기술 ▲원자력 백년기반, 인재와 국민 지지 등 총 5개의 정책 방향 아래 14개의 정책 제안과 40여 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학회는 제안서에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의해 급증하는 무탄소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의 조기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 원전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대비해 습식 저장시설의 최대 활용과 함께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의 조기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층 처분 기술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반 마련, 우라늄의 안정적 수급 체계 확보 등을 추진해 원자력의 지속 이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도, 학회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로 혁신형 SMR 조기 실증과 차세대 대형원전 개발을 꼽았다.

방사선 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동위원소·방사선치료 산업 허브 육성, 방사선 응용연구 및 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방사선 기술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국민과의 과학적 소통 강화 및 규제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복 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이 ‘전기요금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네 가지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에너지 계획은 백년대계여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널뛰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복 원자력학회장은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로 원전 정책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우리 원전 산업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5000여 명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있는 원자력 분야 최대 학술단체이다.



박병인 기자 bip1015@e-platform.net